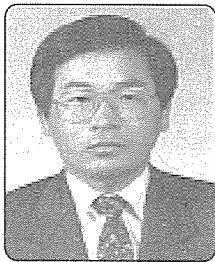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이 찬 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02-2110-6916, lch1011@me.go.kr

〈필자약력〉

학 력

- 미국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주요경력

- 2004.8 ~ 2006.3 환경경제과장

- 2001.8 ~ 2004.8 주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

- 1998.10 ~ 2001.8 금강청 운영국장, 산업폐기물과장, 장관
실 비서관 등

- 1987. 1998.8 홍보협력과, 국제협력과, 정책총괄과, 수도정
책과 등(사무관, 서기관)

1.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는 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버린다는 패턴의 생활 습관 속에 살아 왔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더라도 생산·소비되는 양이 많지 않아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큰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 및 대량 소비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우리 지구촌의 자원도 점점 고갈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인구밀도가 473인/km²에 달하며,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이로 인한 환경부하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폐기물의 인체와 자연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폐기물관리국을 설립한 이후 수도권 매립지의 건설('89)과 의정부 장암('86) 및 부산 사하('91) 소각 시설의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쓰레기 종량제('95) 등 다양한 폐기물관리정책의 도입이 그 예이다.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조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처리에 부수적인 개념으로서의 재활용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폐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여야 하는 순환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정책도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원 투입의 최소화를 통하여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 다음에는 발생된 순환자원인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reuse)하고, 재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질로 재활용(material recycle)하며, 물질재활용도 어려울 경우에는 에너지로 회수(thermal recycle)하는 자원순환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에서는 매립

및 소각과 같은 최종처리는 환경부하 등을 고려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최소한의 폐기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 원칙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은 기존의 폐기물의 안전처리와 재활용(recycle) 위주의 1R 정책에서 벗어나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적극 추진하는 3R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reduce)는 환경설계 등을 통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사용량의 삭감, 제품의 내구성의 향상 등으로 제품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을 연장하는 장(長)수명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회복시켜 계속 사용하는 수리와 정비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사용(reuse)은 특정 사용자로부터 회수된 사용이 완료된 제품과 기기를 그대로 또는 부분적인 수리를 거쳐 다른 사용자가 다시 사용하는 제품 재사용과 사용자로부터 회수된 제품 등으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선별해서 그대로 또는 수리 등을 거쳐 다시 이용하는 부품재사용이 주요 수단이 된다. 재활용(recycle)은 일단 사용한 제품이나 제품의 제조에 수반해서 발생한 부산물을 회수해서 원재료로 이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과 순환자원의 소각을 통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 회수(thermal recycle)가 주요 수단이 된다. 재활용에서도 물질재활용에 비중을 두고, 에너지회수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자원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먼저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등 전(全)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2003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현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타이어, 전자제품 등 21개 품목이며, 동 대상 제품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EPR 대상품목의 수집·운반·재활용 등 각 단계별로 지자체와 재활용 의무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은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외국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전기·전자제품 폐기 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중에 있어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제품의 순환성 평가제도, 개발사업의 순환성 평가제도, 에너지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동 부담금의 부과수준이 당해 제품 폐기물 실처리비용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EPR 대상이 되는 제품이 재활용기준 비용 327원

/kg을 기준으로 부과금이 부과되는데 비하여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은 3.8~7.6원/kg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됨으로써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04년에 시행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부담금을 평균 약 10배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부담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폐기물 전처리시설(Mechanical Biological Waste Treatment)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MBT는 폐기물의 최종 처분 전에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도록 하여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은 최대한 회수 재활용하고, 물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고품연료(RDF)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시설이다. 정부에서는 '07년도에 희망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환경부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포장재의 감량화와 1회용품의 사용규제이다.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인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에 함유되는 중금속의 농도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포장공간과 횡수 등 포장방법을 제시한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및 자율실천선언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기검 soát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자원화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수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적체된 폐비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기술 공모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 할 계획이며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4. 자원순환형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폐기물 관리종합계획』의 수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이 충분한 조율과 조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충분한 시너지 효과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여건과 폐기물의 순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2년도에 수립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초에 완성될 동 수정계획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과 목표 및 투자계획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